

행정학

해설위원 : 이 명 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2017년 지방직 9급 행정학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1문제 밖에 없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반교양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단답형 문제가 넓게 박사는 6문제나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출제문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1]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문8] 정책의 참여자, [문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의 비교에 대한 문제는 일반교양상식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였다.

둘째, [문2] 경제적 규제의 유형, [문5]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문11] 빅데이터의 특징, [문19] 기업특별회계의 적용법률에 대한 문제는 단답형 문제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다. 여기에서 [문14]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문17] 지방교부세의 유형에 대한 문제도 형식은 다소 긴 지문으로 출제되었으나 종류나 유형을 묻는 문제로 단답형 문제에 가까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다소 난이도 높은 문제로는 [문4] 공무원의 사기관리, [문6] 정책문제의 구조화, [문18] 조직의 배태성과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행정학을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고 여러 문제를 접해 본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서울시 7.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올해 기출문제를 분석하기를 바란다. 이미 시험을 치른 문제를 다시 펼쳐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해당년도의 기출문제가 표현만을 달리하여 그 해에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다.

둘째, 어느 정도 행정학 내용이 정리된 수험생이라면 행정학 총론부터 순서대로 학습하기 보다는 많이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부터 학습하는 지혜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학습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반복학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문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답) ④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핵심체크>> 법률과 예산

구 분	예 산	법 률
성 질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의사표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시
제출권자	정 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정부동의 없이 증액 및 세 비 목 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가능
공 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공포해야 효력 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폐지 전까지 계속적 효력 발 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만 효력 발생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 예산변경 불가

문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 ① 소비자안전규제
- ② 산업재해규제
- ③ 환경규제
- ④ 진입규제

(답) ④ 경제적 규제란 정부가 기업의 본원적 활동(시장가격과 경쟁 메커니즘 등)에 개입하는 규제를 말하며, 가격규제, 진입규제(④), 생산량 규제 등이 있다. 사회적 규제란 기업 활동의 해로운 부산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규제를 말하며, 소비자안전규제(①), 산업재해규제(②), 환경규제(③) 등이 있다.

<<핵심체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구 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의 의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제 한 및 개입 조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제한 및 개입조치
목 적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경 제적 비효율성 치유	기업 활동의 해로운 부산물로부터 시 민 보호 및 삶의 질 제고
형성시기	1930년대 이후	1960년대 이후
규제범위	좁음(특정기업군을 규제)	넓음(전 산업을 대상으로 함)
파급효과	적음	큼
포획 가능성	높음(기업의 관료포획을 통해 규제형성)	낮음(공익보호를 위한 활동과 관련되 므로 포획가능성 낮음)
규제효과	대상기업이 적고 목적이 일원 론적이므로 비교적 효과 높음	대상이 비교적 넓고 여러 가지 간 충 돌이 많아서 비교적 효과 낮음
예	가격규제(최저·최고 가격제), 진입규제(특허, 인가, 면허, 허 가, 신고, 등록 등), 생산량 규 제(물량규제), 퇴거규제, 품질 규제, 독과점 규제(담합규제), 수출입 규제 등	환경규제, 산업재해규제, 작업안전 규제, 소비자보호규제, 허위과장광 고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
규제의 합리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다만, 경제적 규제 중 독과점 규제는 시장실패에 근거한 규제이므로 강화하 는 것이 바람직)	

문 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답)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이 곤란해지며 이로 인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핵심체크>> 조직의 원리

의의	• 복잡한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조화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되는 일반원칙 •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은 페이올(Fayol), 굴릭(Gulick)과 어윅(Urwick), 무니(Mooney) 등 고전적 조직이론(행정관리학과)에 의해 제시	
계층제의 원리	의의	조직 내의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 조직단위 간 지휘·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하는 것 (직위·계장·과장·국장·장관)
	필요성	통솔범위의 한계
	하위원리	① 일치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명령계통의 원리, ④ 구성원 동일체의 원리 등
	특징	• 계층제와 통솔범위의 관계 : 역관계 • 조직의 대규모화, 전문화, 업무의 다양화, 구성원 수의 증가는 계층의 수와 정비례 관계 • 계층조직은 계층제 형태를, 참모조직은 계층제 형태를 띠지 않음 •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비정형적인 업무를, 낮을수록 정형적 업무를 담당
분업(전문화)의 원리	의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 분담시킴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원리
	필요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
조정 의 원리	의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정연하게 결합하고 배열하는 원리
	수평적 기제	•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 방법 - 정보시스템, 직접접촉(연락담당자 지정), 임시사업단(TF), 프로젝트 매니저(통합관리자), 프로젝트 팀, 위원회나 회의, 상위통합기구의 활용 등
	수직적 기제	•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을 통제·조정하는 방법 - 계층제의 활용 또는 계층직위의 추가, 규칙과 상위계획의 마련, 수직정보시스템(정기보고, 문서화된 정보, 정보통신시스템)의 활용 등
명령통일 의 원리	조직구성원은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해야 한다는 원리 또는 조직구성원은 두 사람의 상관을 섬겨서는 안된다는 원리	
통솔범위 의 원리	상관 또는 감독자가 그의 주의력과 능력에 비추어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또는 조직단위의 수에 대한 원리	
부처편성 의 원리	조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편성의 기준을 밝히고자 하는 원리 - 목적·기능별 분류, 과정·절차별 분류, 대상·고객별 분류, 지역·장소별 분류	
평가	사이먼 등 행태론자들은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 ② 환경영향평가
-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답) ②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③)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는 자체평가(④),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 특정평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는 자체평가(①), 국가위임사무 등의 평가가 있다.

<<핵심체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 행정 기관	자체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위원회(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함
		재평가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가 정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특정 평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실시해야 함
	지방 자치 단체	자체 평가	단체장이 자체평가위원회(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를 구성하여 평가해야 함
		합동 평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행자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위(행자부 소속, 민간위원은 2/3이상 참여, 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민간위원 중 지명)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문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답) ③ 정책문제의 구조화는 ① 문제의 감지(문제상황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단계), ② 문제의 탐색(여러 정책관련자들이 제시한 문제표현을 발견하는 단계), ③ 문제의 정의(많은 문제표현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표현을 선택하는 단계), ④ 문제의 구체화(문제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단계)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문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답) ① 성공적 정책집행의 조건을 제시한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문 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답) ②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오답정리>>

- ①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핵심체크>> 성공적 정책집행의 조건

문제의 성격	정치적 요인	법적 요인
-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성이 명확할 경우 - 요구되는 행태의 변화가 적을 경우 - 대상 집단의 행태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을 경우 - 정책수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타당한 인과이론이 존재할 경우 - 정책이 단기적이고 하부적일 경우 - 재분배정책보다는 분배정책의 경우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인 경우	- 행정수반, 의회 및 상급기관 등 정책결정기관의 조직화된 지원과 관심 - 지속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지원조직의 구축과 활성화 - 일반대중의 지지 및 대중매체의 관심이 클 경우 - 집행관료의 적극성과 지도력이 클 경우 - 사회·경제·기술적 상황과 여건이 정책에 긍정적일 경우 - 정책집행자의 지적능력과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	- 법규상 목표가 명확할 경우 - 표준적 결정규칙이 목표와 부합할 경우 - 국외자의 공식적 참여가 인정되어 외부의 감독권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지배기관의 계층적 통합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단순한 조직구조) - 집행담당 공무원 및 집행기관이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경우
성공적 집행의 5가지 조건	- 정책결정의 기술적 타당성(정책과 문제해결 간의 인과관계)을 확보해야 한다. -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법령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 - 능력 있고 몰입도가 높은 공무원이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 결정된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집단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문 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답) ③ 행정기관은 과거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위임입법의 제정과 준수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 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른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답)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은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다.

<<핵심체크>> 브룸(Vroom)의 기대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의의	동기부여는 욕구충족에 기인하기 보다는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기대감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1차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수단성	근무성과(1차 수준의 결과)가 특정 보상(2차 수준의 결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
	유의성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보상에 대한 주관적 매력도)

문 10.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답) 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문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속도(velocity)
- ② 다양성(variety)
- ③ 크기(volume)
- ④ 수동성(passivity)

(답) ④ 빅데이터란 방대한 규모, 짧은 생성주기, 다양한 형태를 지닌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Variety) 측면에서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와 큰 차이가 있다.

문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 ②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③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답) ① 분업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원에게 기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 분담시킴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분업은 안정된 상황에서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나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직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지되기 곤란하다.

문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답)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핵심체크>>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장점	- 경쟁 확보를 통한 생산의 효율성 제고(X-비효율성 타파) - 생산체제의 다원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대응성 증진) - 작은 정부 실현을 통한 정부 규모의 적정화 -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적자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세입증대로 정부재정의 건전화 촉진 -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을 통한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 - 노조의 보수 인상 요구 억제
----	--

단점	• 민간에서도 주주와 경영자 간에 대리손실 존재 • 서비스 가격 상승 및 서비스 공급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곤란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편적·일반적 공급의무 불이행(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책임의무 회피 수단) • 잘못된 공공서비스 제공시 정부와 민간기업 간 책임 떠넘기기 현상 • 역대리인 현상(생산자 선점에서 역선택과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및 감시·통제비용 증가 • 자연독점산업은 민영화하더라도 여전히 독점성을 지녀 X-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횡포 야기 • 크림탈취(Cream Skimming) 현상 야기
----	---

문 14. 「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답) ④ 설문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 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과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아니다.

문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답)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이다.

〈〈핵심체크〉〉 행정통제

구분	특징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내부 통제	•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행정국가 및 정행일원론적 시각에서 중시 •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된 행정국가에서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방식	• 행정수반 및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계층통제(상관)에 의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근평제도에 의한 통제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 기능적 책임에 의한 통제 •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 •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 •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 공익에 의한 통제

외부 통제	•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근대입법국가 및 정행이원론 시각에서 중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민중통제 및 언론통제 • 정당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 및 고객에 의한 통제
-------	--	---	--

문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답) ②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 1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핵심체크〉〉 지방교부세의 종류

유형	의의	의의	•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교부세 • 용도가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며, 조건의 제한이 없는 무대응지원금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100
보통 교부 세	교부 기준	• 행자부장관이 분기별로 교부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법률로 정해진 보통교부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교부	
	특징	•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환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교부함 • 재정력지수가 1이상인 자치단체에는 교부되지 않음(서울·경기 등 10여개)	
	특징	• 특별한 지역적 현안이나 재정수요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	
특별 교부 세	의의	내국세 총액이 19.24% 중 3/100	
	교부 기준	①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재원의 40% - 행자부장관이 교부),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재원의 50% - 국안처장관이 교부), ③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재원의 10% - 행자부장관이 교부)	
특별 교부 세	특징	• 조건을 붙이거나 비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음(특정재원) •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자치단체도 사유발생시 교부받을 수 있음 •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 사유발생시 연중 수시로 교부할 수 있음	

	부동산 교부세	의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감 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교부하는 일반재원
		재원	종합부동산세 전액
		교부 기준	행자부장관이 분기별로 교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특징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 지방정부도 교부받을 수 있음
	소방 안전 교부세	의의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하는 특정재원
		재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교부 기준	국안전장관이 분기별로 교부하며,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
		특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

문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답) ④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는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문화적) 환경이 배태(내재)하고 있는 대로 선택되어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조직의 배태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정부기업예산법」
- ③ 「예산회계법」
-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답) ②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곡 등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기업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사업들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 20. 정부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② 정부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③ 정부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부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③ 정치적으로 임용된 정부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지만,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④	③	②	②	③	①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④	②	②	③	④	②	③